



하이닉스 돈잔치 제동 반도체 성과급 재논의

주주단체, 노동장관·대표 고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란이 형사고발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잇달아 성과급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주주단체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두 회사 대표 이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노사를 넘어 법정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집중교섭에 들어간 SK하이닉스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22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작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

이재명 대통령·최태원 회장 등
잇달아 성과급 개선 필요성 언급

주주단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노동법 연계 시도 대응 국가적 문제”

하이닉스, 자사주 성과급 방안에
노조 ‘주가변동 위험 떠안아’ 반대

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정당한 대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손익 연동 성과급을 임금에 아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본 판결을 제시했다.

고발 사유는 대상별로 다르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삼성전자 파업 예고 당시 파업을 막는 대신 노사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협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SK하이닉스 경영진은 파업 압박도 없이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4조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이 대통령이 성과급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시행령과 행정해석을 통한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위법 사안을 덮고 갈 수는 없다”며 “당장

은 삼성전자의 위법 배당 문제이지만 앞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노동법을 연계하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논란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노사는 이날 충북 진천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오전, 오후 각각 생산직과 사무직 노조가 사측과 협상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노조 요청으로 마련됐다.

노사는 지난해 9월 영업이익의 10%를 PS(초과이익분배금) 재원으로 삼고 기본급 100% 상한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성과급의 80%는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며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이 3차 교섭에서 성과급의 절반가량을 자사주로 돌리는 방안을 꺼내면서 합의가 1년 만에 흔들리게 됐다. 노조는 주택 잔금이나 대출 상환에 성과급을 쓰려던 직원들이 주가 변동 위험을 떠안는 데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갈등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으로 한층 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간담회에서 “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를 사측의 제도 개편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했다. 자사주 지급 방식은 삼성전자가 먼저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해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금으로 지급해 온 기존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보상 체계를 바꾸는 방식이어서 직원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측이 지급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AI 메모리 호황에 따른 실적 급증이 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7조206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직원들은 올해 초 기본급의 2964%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증권가는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본다.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성과급 재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 내부 관계자는 “미국 공장 건설 등 회사의 투자 필요성에는 직원들도 공감하지만 합의 1년 만에 다시 협상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크다”며 “내부에서도 보상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만큼 지급 비율과 직원 선택권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드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갤럭시 Z 폴드8·갤럭시 Z 플립8’을 공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 ‘첫 폴더블 울트라’… 갤럭시Z 3종 공개

英 런던서 ‘갤럭시 언팩 2026’
폴드8 접으면 5.5형, 펼치면 7.6형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최초의 ‘울트라’ 모델을 앞세워 갤럭시 Z 시리즈 라인업을 3종으로 확대했다. 한층 얇고 가벼워진 폼팩터와 에이전트형 인공지능(AI), 강화된 카메라·디스플레이 성능을 앞세워 폴더블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

팩 2026’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 플립8 등 폴더블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를 공개했다.

갤럭시 Z 폴드8은 접었을 때 5.5형 커버 화면과 펼쳤을 때 7.6형 메인 화면을 제공한다. 메인 화면은 4대3 비율을 적용해 영상이나 독서, 게임, 웹 서핑 등 콘텐츠 감상 시 화면 활용도를 높였다. 역대 폴드 제품 중 가장 가벼운 201g의 무게와 4800mAh 배터리도 갖췄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광각·초광각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

에 촬영하는 ‘듀얼 레코딩’과 선택한 인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편집하는 ‘마이 팬캠’ 기능을 통해 촬영과 편집 편의성을 높였다.

폴더블 라인업에 처음 도입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는 8형 대화면과 4.1mm 두께, 215g 무게를 구현했다. 2억 화소 메인 카메라와 폴드 시리즈 최초의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8K 영상 촬영과 시네 LUT 기능을 지원해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나의 기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해법 나올까

李 대통령,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
“부동산 정상화로 양극화 해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 등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자산불평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시장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등과 대출 규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자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10

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100분간 진행된다. 토론회는 이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와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만큼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정책 관련 국민 제안을 접수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주택공급(규제) 분야 1473건, 주택금융 2069건, 부동산세제 1203건 등 476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접수한 주택금융은 주택담보 대출 정책 완화 제안 등 대출규제와 관련된 의견이 많다.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 한도 축소를 하며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금리·만기 등 금융 지원이 변경되는 점도 부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았다.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고밀 개발 확대, 통합심의 의무화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기되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비거주·초고가 1주택 대상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metro

/서예진 기자 syj@



▲정청래 “전대 후보들, 음모론·폭력·가짜뉴스
않겠다고 공동선언해야” /사진 뉴시스
▲국힘 “보호출산제 시행 2년, 유기아동 감소
성과…입양 지원 시급”

▲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공방…법원 첫 심
문 진행
▲중앙선관위 “국조특위 검증 부분에 포함되면
서버 공개 가능”

▲‘페이커’ 이상형, 경장 됐다…‘청소년 도박 예
방’ 명예경찰 위촉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육 강화한다…97만명 참
여 예정